

# 민주 “대통령 거부권 반복은 입법부 무시·국민 모독”

### 당정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공식 건의’ 결정 강력 비판 박광은 “대선공약으로 표 얻고 의료현장 협업 깨뜨려 갈등 확산”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원내대표는 15일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한다.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의 법’도 모자라서 ‘의료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내편, 내편으로 가리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

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당과 정부가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해 직역 간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 되고 신중히 설계되어야 한다”며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어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국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간호계가 단체행동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여기에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

는 ‘거부권 정국’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부여된 권한이지만 그만큼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또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화 이후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으로 전직 대통령들은 재의요구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문제는 극단의 여소야대 상황 속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는 점이다. 실제로 간호법은 물론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특검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떼내다 보니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이해관계가 극심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 한쪽 편을 드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장·전남지사, 문재인 전 대통령 5·18 참배 동행

### 정무수석·초대 각료 인연...강 시장 “5·18정신 헌법수복 천명을”

정무수석과 초대 각료로 각각 인연을 맺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함께하기로 했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오는 17일 오전 11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두 단체장은 문 전 대통령과 광주에서 오찬도 함께 할 예정이다. 강 시장과 김 지사가 함께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지난 1월14일 경남 양산으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낙담이다. 당시 예방에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함께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초대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등을 지내는 등 정치적으로도 인연이 깊다. 이번 참배에는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더 미루지 말고 실행해야 함을 천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 시장은 제43주년 5·18 기념주간 입장문을 내고 “내년 총선과 함께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담길 수 있도록 원포인트 국민투표 개헌을 제안한다”며 “이는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고 사실상 이견이 없는 내용으로 모두가 동의하지만, 누구도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해이고, 내년이면 국가 보고서도 발간된다”며 진실 규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발포 명령자, 행방불명 암매장 장소, 계엄군의 성폭력 범죄 등 국가보고서에 꼭 담겨야 할 사안들이 많다”며 “5·18은 군인이 총부리를 국민에게 돌린 국가폭력 사건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보고서에 내용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조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이어 “5·18은 주먹밥을 나누는 광주시민과 전 국민의 하나 됨으로부터 얻은 값진 승리는 어느 한 사람, 한 단체의 것일 수는 없고 수많은 ‘나’들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강 시장은 5·18 교육관 위탁 운영자 공모와 관련해 일부 5월 단체가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선 “5·18을 두고 누구 것이냐,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갈등을 빚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갈등을 애써 조정하고 부추기는 것은 절대 5·18 정신에 부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지방정가 라운지

### 광주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조례 제정

#### 안평환 시의원 대표발의

광주지역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안평환(민주·북구1)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가 최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광주시장과 배달회사, 배달노동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관련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자문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안전관리 및 노동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

급 등이 담겼다. 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업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유형의 고용과 노동방식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지만 아직 법과 제도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뒤쳐져 있어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제언 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6개월여 간 배달노동자와 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라이더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배달대행업체 대표, 광주시 등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논의해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방안 정책토론회

#### 명진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는 15일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현실과 지원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명진(민주·서구2)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정은 전남대학교 특수교육학부 교수의 ‘가족돌봄 국외 정책현황’ 발제를 시작으로, 박재형 광주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의 ‘가족돌봄 청년들의 실제 사례’를 들은 뒤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족돌봄 청년들이 실제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어려움과 가족돌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명 의원은 “사회 구성원 모두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제도화 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권일 기자 cki@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든든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